

고령화 사회의 화두(話頭)



張 錫 準

보건복지부 차관

우

리 나라도 지난해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5년에 백만명을 넘어선 이래, 1990년 2백만명, 2000년 337만명(전체인구의 7.1%), 그리고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부양률은 크게 늘어난다는 데 있다. 노령인구(65세 이상)와 생산가능인구(14~64세)를 대비한 노인부양비 통계치를 보면, 1970년 5.6%에서 1999년은 9.6%, 2010년에는 14%, 2030년에는 3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30년에 가서는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이러한 부양비율로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령화 사회 제1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주부, 군인, 재수생, 고시준비생 등)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65세 이전의 조기은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자 1인당 노인부양비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 중에도 자립 가능한 노인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보다 정확한 노년부양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양자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책방향은 대체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 조기은퇴자 등에게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일이다.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남녀를 불문하고 은퇴연령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의 경우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듯한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를 위해서는 근속년수가 많은 사람이 상위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풍토도 변해야 한다. 재수생, 고시준비생의 문제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자립노인의 비율을 높이는 일이다.

노인의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될 것이다.


셋째, 비자립노인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는 것이다. 경제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는 개념

을 오래 전부터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sustainable welfare)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폐

지하거나 축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정책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제 노령화문제가 보건복지 분야의 화두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앞으로 「노령화」는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노인 또는 노인정책제도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노령화문제가 보건복지 분야의 화두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앞으로 「노령화」는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로 다루어져야 한다.